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2~4면

식량이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10, 11면

미션·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12~13면

전력·철도·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16면

우크라이나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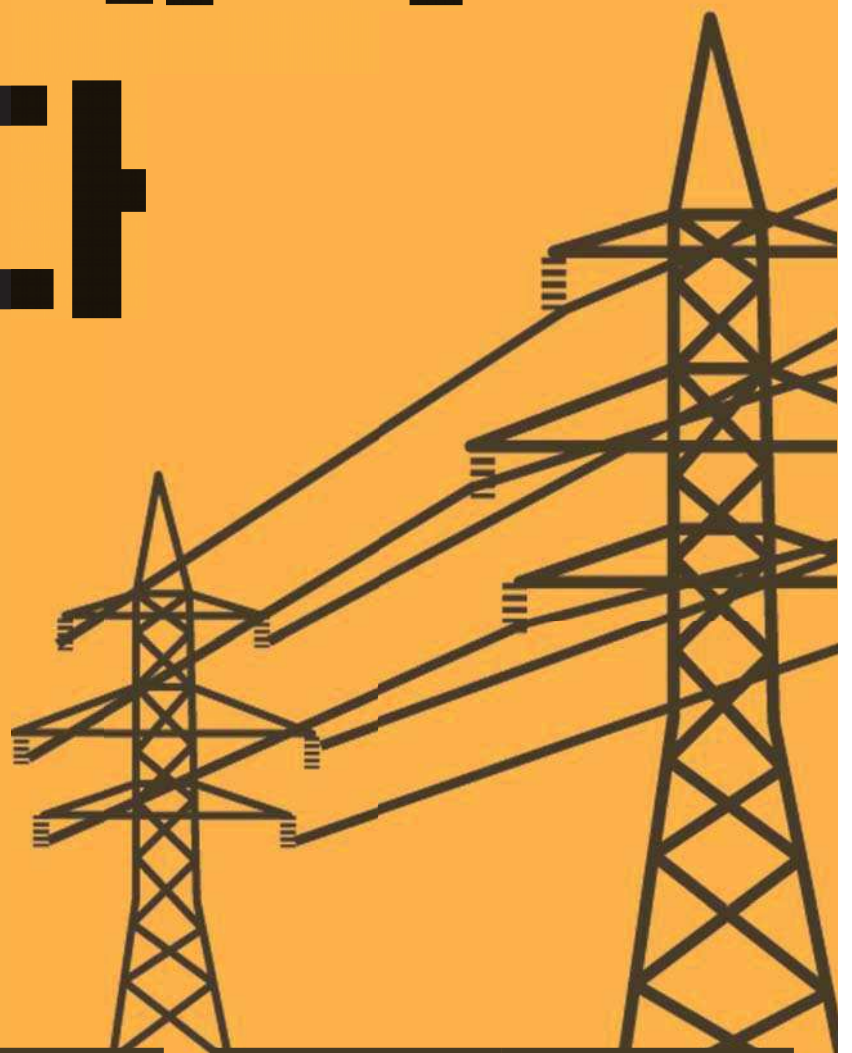
5~9, 11면



전력·철도·의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계획 반대한다

관련 기사 16면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박설

물가가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고유가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투쟁에 나섰다.

6월 7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말고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전국의 주요 항만, 물류 컨테이너기지, 산업단지와 제조·시멘트 공장 등에 집결해 집회와 봉쇄 투쟁을 시작했다.

미친 기름값, 고스란히 노동자 부담으로

올 들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확전 속에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경유가는 사상 처음 2000원을 돌파해 고공행진 중이다.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기름값으로만 매달 수백만 원을 더 쓴다. “일할수록 손해”, “남는 건 늘어나는 빚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기름값 빼고, 톨비 빼고, 식대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른 데다가, 운임은 전과 똑같으니 [생활고] 심각합니다.”(김성진 화물연대 금강지회장)

그러나 노동자들은 유가 폭등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유가 폭등

정부는 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화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유류세와 연동돼 있어 그만큼 보조금도 깎였다.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별도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그 액수를 조금 올렸지만, 많아야 고작 월 30만~40만 원 수준이다. 월 200만~300만 원씩 줄어든 소득을 벌충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노동자들

안전운임제 폐지 말고 확대! 운송료 인상!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유가 보조금을 대폭 올리고, 안전운임제를 폐지 말고 확대 시행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변동을 반영해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이다. 2018년에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제한적으로 제도가 도입됐는데,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로 종료될 상황이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이후 해당 노동자들은 소득이 좀 늘었다. 그래서 과

적·과로 압력이 줄고 주말에는 쉴 수도 있었다. 물론, 이들도 유가 폭등으로 타격을 입었다. 올해 최저 운임이 3월에 결정됐는데, 그 즈음부터 폭등한 유가를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안전운임제

다수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단 6.5퍼센트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폐지 말고 확대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와 재계의 왜곡·비방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자 정부와 재계, 기업주 언론들은 비난을 쏟아 내기 바쁘다. “물류 대란으로 경제가 비상에 걸렸다”면서 말이다. 최근 윤석열이 ‘중요한 건 경제’라고 강조한 것도 무엇보다 화물연대 파업 등 저항을 단속하고 규제 완화, 노동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의도일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은 국가 경쟁력,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야 그 부가 흘러넘쳐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펴다. 그러니 경제 위기 때 노동자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협력하라고 한다.

그러나 1997년 경제 공황 때도,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희생을 강요받았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불평등은 더 확대됐다.

희생

화물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낮은 운임에 장시간 노동으로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곡예를 벌이며 일해 왔지만, 이번에도 위기의 대가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유가가 떨어질 땐 운송료와 보조금을 깎더니, 유가가 치솟으니 경제 사정을 봐서 또 참으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만 조건 후퇴를 막고 생활 수준을

유가가 폭등한 만큼 마땅히 운송료도 올라야 한다.

노동자들은 허리가 휘는데, 이 와중에 정유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며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 1분기 정유 4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4조 7000억 원이 넘는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를 비롯한 100대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30조 6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1.4퍼센트나 늘었다. 이런 막대한 수익에는 노동자들의 피땀이 서려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이런 투쟁을 “집단 이기주의”로 비난하는 것도 부당하다. 보수 언론들은 화물연대가 “그들만의 요구”를 내걸고 봉쇄 투쟁을 해서 비조합원들까지 일을 못 하게 한다고 비난한다. “조합원 잇속만 챙기는 폐법”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이간질이다.

그러나 고유가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와 운송료 인상 요구는 많은 화물 노동자들의 바람이다. 곳곳에서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새롭게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늘어나거나, 비조합원들의 파업 지지 분위기가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뷰

김종열 광주 카캐리어지회장이
파업 이유를 말하다

요즘 자동차 부품 수급이 안 돼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가가 오른 상황까지 겹쳐 매우 힘들죠. 제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 원가량 [추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캐리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했습니다. 투쟁도 했습니다. 몇 시간씩 상차를 거부하고,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싸워서 유가에 대한 보조를 어느 정도 받기로 했어요. 운송료도 조금 올렸어요.

출고장의 미니캐리어들도 [다수가] 조합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니캐리어는 노동조합 가입이 아예 안 돼 있었어

요. 파업을 하면 그 차들이 대체 차량으로 들어와서 효과가 떨어졌죠.

미니캐리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너무 많은 갑질을 당해 왔어요. 관리자가 폭행하기도 하고, 폭언도 예사였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하나하나 바꿔 나가고 있어요. 한 관리자는 5월 말에 우리가 잘리게 만들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년 동안 꿈꿔 온 숙원입니다. 그 꿈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첫째입니다. 정부가 유류 환급금을 마음대로 줄이는 것을 막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뷰·정리 안우춘

인터뷰

황남열 하이트진로지부장이
파업 이유를 말하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6월 7일이니까, 어차피 우리도 때가 됐고 해서 6월 2일부로 [먼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외부 용차 취급을 받아 왔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화물차] 기사들은 [공장 내] 식당에서 밥을 안 줘요. 수년 동안 요구해서 복지 차원에서 5년 전부터 [회사가] 식사를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지독하죠. 대신 밥값을 좀 받아서 기사 대기실에서 아침에 라면을 먹고, 그렇게 2년 반을 해 왔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도 아닌지, 참 기가 막혔죠. 철조망으로 딱 막아 버리더라고요. [이천 공장에] 기사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소변기 2개 있는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따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언짢았습니다.

운임도 동종 업계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30퍼센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대체인력으로 용차를 불러 써도 한계가 큼니다. 3분의 1 정도 출고될까 말까 해요. 직매장들은 재고가 바닥 수준이에요. [공급이 안 되니까] 조그만 대리점, 도매장에서 직접 공장으로 술을 가지러 오기도 해요.

우리가 먼저 파업한다고, 다른 조합원들이 지나가다가 찾아오고, 손을 흔들어 주고, 음료수도 갖다 [줬어요]. 힘이 됩니다.

요즘 유가 [인상] 때문에 다들 불만이 많아요. 비조합원도 화물연대 파업하면 같이 [차들] 세우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뷰·정리 박설



파업으로 멈춰 선 의왕기지

대체수송 저지 정당하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수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 차량과 정부 차량 등을 동원해 긴급 수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주들도 대체수송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화물 노동자들이 주요 항만과 공장 등을 봉쇄하고 대체수송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이 대체수송을 저지하는 것은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투쟁 방식이다. 이는 국제 노동운동에서 ‘피켓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역사가 깊은 전술이다.

이런 전술을 통해 화물연대는 2003년에 부산의 주요 부두와 의왕기지 등을 봉쇄해 20만 대의 화물차 운행을 막는 단호한 행동으로 정부의 양보

를 얻어 낸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은 대체수송 저지 투쟁에 진저리를 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무관용 원칙”과 “법치”를 세우겠다며 강경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지난해 자기가 가둔 박근혜를 취임식에 초대해 면죄부를 준 건 “법치”에 걸맞는가? 당선하자마자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를 가석방한 건 또 어떤가? 가석방된 이재용을 아예 사면하려고도 한다.

이처럼 정부가 말하는 “법 질서”는 자본가와 권력자들을 위한 것일 뿐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를 위해서는 단호한 파업과 함께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옮겨도 최근 철도노조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화물열차를 통한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물류를 멈추고 연대를 모을 잠재력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에 맞설 투쟁 잠재력이 크다.

물류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 구실을 한다. 그중에서도 육상 화물운송은 물류산업의 대동맥과도 같은 존재다. 국내 물류의 90퍼센트 이상이 도로로 운송된다. 파업과 봉쇄 투쟁으로 이를 멈춰 세울 힘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고유가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요구는 물가 인상의 고통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투쟁이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등에도 영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화물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6월 2일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 파업 출정식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강동훈

최근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30퍼센트로 늘렸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5월 첫 주에만 기름값이 떨어졌을 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달 수백만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6월 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기름값이 치솟은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와 서방의 제국주의 대리전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러시아의 공격과 나토의 확전 시도, 미국·유럽연합의 러시아 봉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유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퍼센트 가까이 축소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정도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 등 군수 지원을 늘려 나토의 확전 시도를 지지하면서 국제 유가 인상에 한몫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 때문에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

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OPEC와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는 7~8월에 하루 64만 8000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정도로는 세계 석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국제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산을 보면, 러시아가 4월에만 이미 하루 100만 배럴 가까이를 감산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에는 러시아 석유 생산량이 하루 300만 배럴 가까이 줄어들 것

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석유 생산 국가들이 단시간 내에 러시아의 감산 물량을 채울 능력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상하이·베이징 등 코로나 19로 봉쇄됐던 중국 대도시 봉쇄가 풀리면서 세계 석유 수요는 더욱 증가할 공산이 크다.

한편, 석유 가격 급등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5월 수출은 615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3퍼센트 증가했다. 그러나 석유·가스 등의 가격이 급등하며 수입(632억 2000만 달러)이 32퍼센트나 증가해, 무역수지는 17억 1000만 달러 적자였다.

게다가 4월에는 생산(0.7퍼센트), 소비(0.2퍼센트), 투자(7.5퍼센트)가 모두 감소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 효과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처럼 경제 불안정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지켜 주려고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데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공공부문에서 민영화 확대 등으로 물가 인상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해 임금 인상 투쟁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치솟는 물가에 감소하는 실질임금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한국의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퍼센트나 올랐다. 2008년 8월(5.6퍼센트) 이후 최고치다.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석유 제품과 축산물이었다. 경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8퍼센트, 휘발유는 27퍼센트나 뛰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밀가루(26퍼센트), 식용유(22.7퍼센트), 빵(9.1퍼센트) 등도 크게 올랐고, 돼지고기(20.7퍼센트), 수입 쇠고기(27.9퍼센트), 닭고기(16.1퍼센트) 등 축산품의 물가도 두 자릿수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퍼센트나 오르며 2010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

가 치솟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인상해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0.1퍼센트포인트

윤석열 정부는 돼지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 관세를 낮추고, 수입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정부 예상으로도 물가를 0.1퍼센트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낸다고 하니, 최근 5퍼센트를 넘은 물가상승률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6퍼센트대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소비

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1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대폭 상향했다.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내고 있다.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1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임금이 물가만큼도 오르지 않아 올해 실질임금은 2.2퍼센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3퍼센트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물가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 3월 상용 노동자 임금은 4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7퍼센트 올라 물가상승률을 겨우 따라잡고 있지만, 임

시일용 노동자 임금은 174만 5000원으로 3퍼센트(5만 1000원)밖에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석유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은 1분기에만 영업이익으로 4조 6244억 원을 벌었다. 2분기에도 1분기 못지않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노동자 등 서민층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 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생필품 가격 인상을 규제하고, 유류세와 공공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나토의 무기 지원 확대로 미국·러시아 대리전이 강화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00일이 지난 지금, 러시아의 공격과 나토의 확전이라는 암울한 패턴은 계속되고 있다.

5월 31일(현지 시각)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40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일부이다.

이번 무기 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사거리가 80킬로미터에 이르는 정밀 타격 포탄이 포함돼 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뉴욕 타임스〉에 이렇게 썼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더 진보한 로켓 시스템과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장에서 주요 표적을 더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우크라이나가 HIMARS로 러시아 영토를 포격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총리 올라프 솔츠는 독

일의 가장 현대적인 대공 방어 체계인 IRIS-T와 적의 포대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덴마크를 통해 대함 미사일 하품을 수령 중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자주 곡사포 M109 팔라딘을 미국에게서 직접 지원받기도 했다. M109 팔라딘은 45킬로그램짜리 포탄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가 40킬로미터나 된다.

오썩하게도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주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 야르스 등의 핵전력을 동원한 군사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

러시아 서부 이바노보주(州)에서 벌어진 이 훈련에는 장병 1000명을 동원한 야르스 기동 훈련이 포함됐다. 야르스의 사정거리는 1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며칠 전인 2월 19일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지방의 임시 주도(州都)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

크주(州) 주지사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러시아는 세베로도네츠크의 70퍼센트를 장악했다. 주민 대부분이 피난을 떠났고 폭격으로 파괴된 이 도시는 전쟁 전 10만 명 넘게 살던 곳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한다. “유럽의 동맹국들이 갈수록 분열하면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전선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프랑스·독일을 비롯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갈수록 더 강력한 무기를 쏟아붓는 것에 따라 대가와 위험성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이 정부들은 대중의 생활비 위기가 심각해지고 물가 상승과 공급 대란으로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것에 압박을 받고 있다.

5월에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는 독일인의 46퍼센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화기 지원이 늘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밖으로 번질까 봐 두렵다고 답했다. 다른 여론 조사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인들도 비슷한 비율로 그렇게 답했다.

5월 20일 이탈리아에서는 비교적 급진적인 소규모 노동조합들이 파업을 벌이며 생활비 관련 요구와 함께 나토의 전쟁 개입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6월 12일과 19일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을 신뢰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대 서방 사이에서 벌어지는 더 광범한 전쟁의 최전선”으로 여긴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일부 균열이 있지만, 휘발유·가스·전기 요금이 오르는데도 계속해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서방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수모를 만회하고 러시아를 굴복시킨 뒤 중국과 대결하기를 바란다. 푸틴은 돈바스 지방을 어느 정도 점령하면, 모종의 승리를 선언해 국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른 인접국들에 러시아의 힘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런 강대국들 사이의 대리전에 휘말려 있다. 양측의 강대국들 모두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만혈안이 돼 있다.

비극이 시작된 지 100일을 넘기고 있는 지금, 러시아와 서방 모두에서 저항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져야 한다. 제국주의적 참극에 대한 반대와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에 맞선 반격을 융합시켜야 한다.

찰리 김버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07호 번역 김준호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에서 서방을 편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려고 한다.

먼저, 155mm 포탄 10만 발을 캐나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 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 이른바 '비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살상용' 전투 무기까지 지원하려 한다.

SBS가 보도한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군 비축분 10만 발을 포탄 제조업체 풍산에 주면, 풍산은 캐나다에 10만 발을 수출할 것”이다. 그러면 풍산은 캐나다에게서 받은 돈으로 10만 발을 새로 만들어 군에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풍산은 과거 군부 독재 정권과 긴밀했던 업체다. 바레인과 미얀마 등에서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사용된 최루탄 등의 무기류를 생산·수출해 온 전력도 있다.

또, 한국 정부는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자국 전차의 절반과 각종 자주포, 전투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대여하는 등 전쟁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차체에 자국산 곡사포 포탑을 얹어 운용해 왔다. 그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폴란드 국방장



한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하는 155mm 포탄

관 마리우시 브와슈차크는 국방장관 이종섭과 방위사업청장 등을 만난 후 군수업체인 한화디펜스, 현대로템의 공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각각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이 무기들이 폴란드로 수출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개연성이 있다.

대전차용 K-4 고속유탄기관총은 이미 예비 수출 심사를 통과해 폴란드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한국 무기업체들은 이미 러시아 인접국에 무기를 판매해 왔다. 나토 가입국인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서방의 대리시아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스웨덴·핀란드에도 K-9 자주포 등을 수출해 왔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한국은 무기 수출 순위 세계 9위 국가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움직임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여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확립 과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보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위험이 높다. 러시아는 물론 대만 등을 놓고 미국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는 중국의 반발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박이량

추천 책

신간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러시아·미국·영국·한국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반대를 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로잘리, 김준호, 이원웅 외 지음, 책갈피, 352쪽, 17,000원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가 서방 측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3국을 통한 무기 지원을 추진 중인 것에 더해, 윤석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대통령 경호·의전팀을 파견해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 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확대다.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등 대(對)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의제들도 다뤄질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서방 제국주의에 힘을 실는 효과를 낸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중국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 노동당 소속 정치인)는 이번 회의가 “러시아·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해지는 시기에 대비하고, 억지력·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기 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나토와 아시아의 친미 동맹들의 연합 전선을 구축해 러시아·중국 포위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

6월 3일에는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국회의원 몇 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갔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개전 이후 아시아 국가 정당들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이다.

▶ 7면으로 이어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딜레마

얼마 전까지도 서방 정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떤 조건으로 언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외교 문제 수석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푸틴의 뜻대로 될 것인가?” 하고 물었다(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5월 31일치). 그리고 이렇게 답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에서 진군하고 있다.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산업 중심 도시들을 장악하고 해상을 차단시킬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국가로 살아남을지 의문이다. 이런 암울한 시나리오는 분명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전쟁 프로파간다가 난무하고 있음을 감안해도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편 다 인명·무기·공장설비·사회기반시설 등의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매일 100명씩 죽는다고 말했다. 전사자 수를 부풀렸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젤렌스키는 무기 제공 속도를 높이라고 서방 정부들에 촉구하는 수단으로 전사자 수를 이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특히 사정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다연장로켓(MLRS) 제공을 미국에 끊임없이 요청했다. MLRS는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의 반격으로 상황이 견잡을 수 없게 될까 봐 우려해 제공을 거부했다.

그 대신에 바이든 정부가 타협책으로 내놓은 게 사정거리 70~80킬로미터 중거리 유도 다연장로켓(GMLRS) 지원이었다.

그러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로켓 무기를 공급하면 새로운 타격 목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6월 5일 러시아군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키예프(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다.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마지막으로 공격한 지 38일 만이다.

러시아군의 손실도 막대하다. 러시아는 손실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5월 초순까지 러시아군 탱크 1170대가 파괴됐다(러시아 전체 탱크 전력의 40퍼센트).

서방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무기를 보강하는 데 애로가 있다.

“러시아는 현재 반도체가 부족해 식기세척기와 냉동차에서 컴퓨터 칩을 빼 군사 장비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전투에서 약 1000대의 탱크를 잃었고, 러시아 탱크 제조업체 두 곳이 부품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했

다고 주장한다.”(위에서 인용한 래크먼의 칼럼)

군사·경제 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혀 대칭적이지 않다. 2020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1조 4000억 달러로, 우크라이나(1400억 달러)의 10배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2위로, 22위인 우크라이나보다 월등하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패배할 게 뻔하다. 그러나 서방의 지원에는 딜레마가 있다.

먼저, 서방 지배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앙적인 세계 대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바이든은 5월 31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공격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거나 러시아군을 공격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 벌이는 대리전에서 물러설 생각은 결코 없다.

또 다른 딜레마는 서방의 경제 위기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양날의 칼이다.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지만, 동시에 유럽연합(과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프랑스는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6월 4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프랑스가 중재자 구실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다. “러시아에 굴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야 싸움이 멈춘 날 외교적 수단으로 출구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 솔직하게 뜻하는 바는, 돈바스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체의 ‘독립’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그런 말은 굴욕적”이라고 발끈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런 타협 압력에 반발하며 확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확전이 핵 재앙의 위험에 더 가까워지게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반전 운동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무기 제공 요청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김인식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 6면에서 이어짐

이준석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만나고 그 결과를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는 그동안 (친)서방 국가들에 무기 지원을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이준석 출국 전에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드미트로 포노마렌코를 통해 또다시 무기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임이 명백하다. 한국은 참여한 강대국들 간 갈등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중국 문제가 있다. 그간 중국은 나토의 힘이 아시아로 투사될 것을 크게 경계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제국

주의적 영향력 확장에 더욱 힘을 실으려 한다.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 제고에 득이 되리라 보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본지 419호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모순’).

그러나 이런 행보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에도 도움되지 않고, 아시아에서도 긴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김준호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이원웅

5월 20일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의 좌파 활동가 타라스 빌로우스가 쓴 ‘자결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글을 번역·발표했다.

타라스 빌로우스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러시아는 공격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인민해방전쟁을 벌이고 있다.” (2)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러시아는 더 보수화해 “준파시즘 정권”이 됐다. (3)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만 진보적인 변화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좌파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지하고 (서방의) 무기 지원에도 지지를 보내야 한다.

현재 비극의 현장이 된 우크라이나의 활동가가 전하는 말인 만큼 이런 메시지는 무겁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우

리는 냉엄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고,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살상하고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러시아군인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는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지키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철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빌로우스는 자신이 글 서두에서 던진 다음과 같은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가?”

빌로우스는 “제국주의 간 충돌”이 이 전쟁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구실이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이 미국을 대신해 ISIS 소탕 작전을 벌였을 때 미국이 했던 구실보다 더 작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런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전쟁은 국민 방위 전쟁이지만, 서방은 이를 통해 러시아와 대결하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가 전쟁에서 하는 결정적 역할

서방은 분명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 예컨대 5월 21일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체 국가 예산에 맞먹는 규모이고, 대부분이 군사적 지원에 쓰일 것이다. 또, 서방은 온갖 첨단 무기를 지원하면서 그 하이테크 무기들을 어디에 쏘아 할지 좌표를 찍어 주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러시아 약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있다.

서방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대대적인 러시아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는 흔히 평화적 압력 수단으로 묘사되지만, 현대적인 형태의 제재를 처음 발전시킨 20세기 초 국제연맹의 설립자들은 제재를 국제 질서를 강제할 “전쟁보다 무시무시한 수단,” “경제적 무기”(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한 말)로 여겼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경제 전쟁을 넘어선 강대국들 간 직접 충돌과 심지어 핵전쟁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런 충돌은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당한 수모를 만회하고 동맹국들을 결집시켜 더 유리한 조건에서 중국을 제압하려 한다. 애초 푸틴의 침공 의도와 달리 나토의 영향력은 이제 러시아 북쪽 국경으로 확장됐다. 서방 국가들은 이번 전쟁을 구

실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특히, 독일은 재무장에 나섰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빌로우스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쟁을 대리전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어느 대리전에서도 ‘대리인’이 자기 이해관계가 없는 순전한 꼭두각시였을 뿐인 적은 없었다.

자결권,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이나 억압받는 민족의 안위를 걱정한다며 개입을 정당화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제1차세계대전 때 러시아 제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침공에 직면한 세르비아를 지켜 주겠다고 참전했다. 1938년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할 때 내세운 명분도 체코 주데텐란트 지역의 핍박받는 독일어 사용 주민들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한

논리의 하나도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혁명적 좌파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억압하는 나라의 노동자들과 혁명적 좌파가 억압받는 나라의 자결권(분리·독립을 포함한)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다른 민족(인민, 국민)을 억압하는 민족(인민, 국

민)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민족 자결권 지지는 주의해서 봐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티베트인 탄압을 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지독한 위선이다. 물론 위구르족이나 티베트인들의 자결권이라는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자결권 주장이 특정 제국주의 세력과 반대해 다른 제국주의 세력과 협력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이것은 제1차세계대전 때 혁명가들

이 부딪힌 매우 큰 문제였다. 그 전쟁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슬라브인들의 소국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 제국이 세르비아를 지키겠다고 전쟁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차르의 러시아 제국은 “세르비아의 해방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레닌 등 당시 러시아 혁명가들은 그런 전쟁 프로파간다에 넘어가지 않았다. 레닌은 “오스트리아-세르비아 전쟁의 민족적 요소는 부차적이며 이 전쟁의 전반적인 제국주의적 성

▶ 9면으로 이어짐

국제주의가 출발점이어야 한다



5월 21일 서울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 8면에서 이어짐

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전쟁은 열강들의 충돌로 급속히 확대돼 “오스트리아-세르비아 전쟁”이 아니라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전쟁 전부터 레닌은 민족 억압 문제를 외면하거나 피억압 민족의 “자치권”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했고, 분리·독립의 권리를 포함한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줄기차게 옹호했다. 그러나 그런 권리가 위의 사례처럼 구체적 조건에서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과 모순을 빚을 때는 언제나 그는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과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봤다.

사실, 자결권 옹호는 기본적으로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것이었다. 또, 혁명 전략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전술에 관련된 것이기도 했다. 레닌은 피억압 민족의 반란이 제국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국제 노동계급이 그들의 자결권을 지지하며 그런 반란들을 자국 지배계급과 싸우는 데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런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기초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침공에 직면해 자국 방위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됐던) 세르비아에서도 두 사회주의자 의원이 자국의 전쟁 공채 발행(오늘날로 치면 국방 예산 증액)에 용감하

게 반대표를 던졌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제국주의에 맞서 러시아 제국주의를 지지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마르크스 시절부터 제정 러시아는 반동의 보루로 여겨졌고, 그런 러시아의 억압을 받던 폴란드인들의 자결권은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지지를 널리 받아 왔다.

그런데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일부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은 독일 제국주의에 협조하려 했다. 1916년 독일군 점령지에 폴란드 정부가 세워질 즈음 레닌은 이렇게 강조했다.

단지 폴란드를 되찾으려고 온 유럽을 전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가장 나쁜 종류의 민족주의일 것이다. 그저 소수 폴란드인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고통에 빠뜨리는 꼴이 될 것이다.

한편, 이제 도리어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이 폴란드를 (독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자, 레닌은 이렇게 강조했다.

이제 러시아의 사회민주주의자들 [당시에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마르크스주의를 가리키는 말이었대는 ... “폴란드 독립”과 같은 구호

가 러시아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이런 구호는 전쟁을 지속하려는 야욕을 표현하고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구호는 “폴란드를 둘러싼 전쟁에 반대한다”여야 한다.

이처럼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받는 인민의 자결권이라는 대의를 일반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자결권 요구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근본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과 특수, 전체와 부분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구분의 중요성은 1960~1970년대의 베트남 전쟁을 봐도 알 수 있다. 베트남 한 나라의 차원에서만 보면,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는 그저 반노동계급적 스탈린주의 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호찌민은 분명 용감한 민족해방 투사였지만 1945년 자신의 스탈린주의적 노선을 거슬러 투쟁을 더 밀어붙이려는 파업 노동자들과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무자비하게 총살한 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제 사회주의자들은 그 전쟁에서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했다. 국제적 차원에서 베트남 국민의 승리는 미국 제국주의를 약화시키고 세계 곳곳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고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빌로우스는 국제주의자를 자처하지만 그의 출발점은 사실 우크라이나이다. 빌로우스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기대어 전쟁에 승리한다면 극우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려고,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즘에 맞선 운동이 얼마나 전진했고 극우가 얼마나 악화돼 왔는지를 자세히 다룬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나타나는 제국주의 갈등의 동학이 무시된 채 펴는 빌로우스의 논의는 그의 시선이 온통 우크라이나에만 쏠려 있다는 인상을 준다.

빌로우스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강제로 국경을 다시 그은 선례를 만들어”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침공을 시작한 것은 러시아이지만, 미국 등 서방도 러시아가 이렇게 나올 것임을 알고도 나토를 확장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라는 더 강력한 강대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제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충돌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우크라이나가 제국주의(적)간 충돌의 무대가 된 것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에 맞서려면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체제에 맞선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구체적 조건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한다.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정부가 추진하거나 지지하는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상대국의 제국주의만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자국 제국주의(또는 친제국주의)에 힘을 실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들의 출발점은 서방과 러시아 모두의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젤렌스키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오로지 이것만이 우크라이나 노동계급과 전 세계 노동계급의 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반면, 부문적·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 (국제) 노동계급의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두고 레닌은 “기회주의”라고 일컬었다.)

식량이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샘 오드

전쟁과 제국주의 갈등 와중에 식량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떠한 총·폭탄·미사일보다도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가 주요 식량을 쌓아만 두고 우크라이나산 곡물도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처럼 식량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프리카에서 기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렇게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식량을 무기화하면 침공으로 달성하지 못한 일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 그보다 훨씬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식량 공급이 말 그대로 러시아군의 볼모가 됐다.”

통제

그러나 블링컨은 위선자다. 식량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언제나 강력한 무기로 이용돼 왔다. 미국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전쟁이 파괴를 부르면 공급로가 끊기고 파괴되며, 식품 생산 인프라가 무너지고, 노동자들은 분쟁 지역을 탈출한다.

계절에 따른 재배와 유통망이 교란돼 전 세계적으로 빈곤이 증대한다. 식량이 있다 해도, 포위된 정부는 식량을 제대로 유통할 수 없거나 유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식량 공급을 통제하는 자가 국민을 통제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나라에서 생산된 주식 식량이 세계의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흔하다. 옥수수 수출의 거의 40퍼센트는 미국산이고 쌀 수출의 30퍼센트는 중국산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생산량의 30퍼센트와 해바라기씨유 생산량의 69퍼센트를 생산한다.

세계 식량 공급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다 보니 이 소수의 국가들은 커다란 힘을 휘두른다.

다른 나라들은 이들 국가에 식량을 의존하고, 이들 국가는 식량을

공급받는 국가의 국경 안에 군사 기지를 짓고 무역로를 이용하는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식량을 제국주의적 무기로 이용한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 아니다.

1974년에 미국 농무부 장관 얼 버츠는 이렇게 말했다. “식량은 무기다. 식량은 이제 우리의 주요 협상 수단의 하나다.” 1980년에 버츠의 후임자 존 볼록도 이런 견해를 지지했다. “식량은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고 본다.”

식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듯 식량도 상품화된다.

식량을 구매할 수 있으려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일정한 구실을 수행해야 한다. 식량을 살 임금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국가나 자선 단체가 나눠 주는 식량으로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한다.

영국에서 식량의 상품화는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인클로저 법이 시행된 이후 발전했다. 이 법으로 개방경지제도 철폐되고 농민들이 토지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부유한 지주들은 토지를 장악하고 사람들이 더는 자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의 성장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토지를 잃어 일손을 덜 몸뚱이만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때 소유했던 식량을 사기 위해 임금을 받고 일해야 했다. 다른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러 도시에 정착했다.

자본주의는 지배계급이 식량을 제국주의의 무기나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던 정착민들은 중부의 평원을 정복해서 철도를 건설하려 했다. 그러자 이미 그곳에 살던 원주민의 저항에 부딪혔다.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군들은 원주민들의 핵심 단



사진 출처 Save the Children Canada

“세계 최대의 인도적 위기” 서방의 주요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봉쇄로 기아가 만연한 예멘

백질 공급원인 들소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한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한 모든 들소를 죽여라. 들소 한 마리를 죽일 때마다 인디언 한 명이 사라진다.”

1700년대 후반에 6000만 마리 이상이었던 들소는 1889년에 541마리로 감소했다. 그 결과 원주민 인구가 급감했다.

영국에서 건너 온 식민지 정복자들이 호주를 정복했을 때도 비슷한 전술이 동원됐다. 원주민들은 식량의 원천이었던 사냥터와 호수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원조의 대가

식량의 무기화는 기아와 기근을 초래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제국주의적 이익에 따라 식량을 공급할 수도 있다.

냉전기에 미국은 여러 나라에 식량을 원조해서, [신생 독립국들이] 소련식 국가자본주의로 기울던 당시의 추세에서 그 나라들을 멀어지게 하고 자본주의 질서에 얹어 놓으려 했다.

인도는 1950~1960년대에 미국의 주요 원조 수혜국이었다. 이 원조는 인도를 소련과 멀어지게 하고, 인도 국내에서 성장하던 공산주의 운동을 억제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덕분에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교역 관계를 맺고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연 재해를 악착빠르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2010년 대지진이 아이티를 강타했을 때가 바로 그랬다. 식량은 재난을 당한 아이티에 공짜로 제공되지 않았고, 미국의 더 많은 군사적 간섭이라는 대가가 따랐다.

자본가들이 기아, 영양실조, 대량 학살을 일으키려고 식량 공급을 제한하는 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상시적이었다.

1973년 미국은 칠레에 대한 식량 원조를 중단했다. 칠레는 인구를 먹여 살릴 충분한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나라였다. 미국은 칠레에 대한 식량 수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는 살바도르 아옌데의 좌파 정부를 전복시킨 쿠데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식량이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로 이용되는지는 한때 동아프리카에서 미국의 필수적인 동맹국으로 여겨졌던 수단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1983년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수단 인민해방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다. 식량은 정치적으로 중요했다. 정부는

▶ 11면으로 이어짐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

▶ 10면에서 이어짐

군대에 지출할 외화를 얻으려고 신속하게 농산물을 수출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또, 수단 정부는 반정부 세력 대부분이 기반을 둔 수단 남부로 식량이 가지 못하게 했다.

1989년 6월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가 [이전 친미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미국은 위선적이게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군사 쿠데타로 무너졌다는 이유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1990년에 수단 정부는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식량 원조를 요청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이 요청을 거절했다.

흔히 제국주의자들은 식량 수출 중단이 수단의 사례처럼 전쟁 범죄나 쿠데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동맹국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내전이 한창인,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예멘에 구호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15년부터 시작되고, 2년 뒤에 더 강화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봉쇄 조치 때문이다.

서방의 주요 동맹국이자 석유 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의 항구를 폐쇄하고 어선을 포격했다. 2020년 5월 유엔 기구인 유니세프는 예멘이 “세계 최대의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범죄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영국은 2015년 이래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적게는 84억 파운드, 많게는 200억 파운드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1100억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현재 예멘에 제공되는 구호는 대부분 셰이브더칠드런 같은 자선 단체들이 제공하는 것이다.

식량 원조 중단과 봉쇄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끊는 것은 제국주의가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의 하나다.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등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면, 서방은 경제 봉쇄와 식량 원조 중단으로 대응했다.

강대국들

식량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대부분의 공급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급격히 가속화하면서 상황은 틀림없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인도 정부는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과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밀 수출을 중단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프랑스를 비

롯한 유럽 국가들은 흉작과 산불·가뭄 등 기상 이변이 낳을 현상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식량을 무기로 이용한 결과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1943년 영국 지배자들이 벵골의 대기근을 방치하자 평범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곡물 창고를 습격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인도를 대영제국에서 독립시킨 최종적인 독립 투쟁의 선봉이 됐다.

식량 가격이 치솟는 오늘날 굶주리는 사람들의 분노는 더 크게 폭발할 공산이 크다. 올해에만 이미 수단과 이란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런 투쟁들은 독재자를 타도하고 제국주의자들을 패퇴시킬 잠재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박탈하는 체제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런 박탈을 끝장내려면 식량 공급을 평범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권층이 공급을 비축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해체해야 한다.

역사를 보면 전쟁과 치솟는 식량 가격에 대항하는 항쟁과 파업이 숏하게 있어 왔다. 이는 변화가 가능한 것임을 보여 준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07호 / 번역 박이람

주요 NGO와 노동단체,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하다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라는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 왔[지만] ...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한다면 직접적이든 우회적이든 살상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의 이런 입장은 환영해야 마땅하다. 이런 입장 표명은 아마도 전쟁이 우크라이나군을 앞세운 서방 대 러시아의 대결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넘긴 지금, 서방과 러시아 모두 물러서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며 세계를 점점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기존의 입장”

그런데 주요 시민·노동 단체는 한국 정부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존의 입장”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1억 달러에 이르는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서방이 주도한 러시아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타격해 푸틴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경제적·금융적 총력전”(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이고, 한국 정부의 “비전투 군수물자”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의 원활한 전쟁 수행을 돕는 행위다. 바이든이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지원에 특별히 감사를 표한 것도 그래서다.

이렇듯 한국 정부의 ‘비살상’ 무기 지원도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서방의 대리전을 정치적·군사적으로 돕는 행위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는 관계없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나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에 최대의 타격을 주려고 한다.

어떤 형태이든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김준호



올해 4월 식량 부족과 물가 폭등에 항의해 스리랑카에서 벌어진 대통령 퇴진 시위

사진 출처: Nazly Armed(물리자)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김영익

2002년 6월은 월드컵 열기로 가득 찬 시절이었다. 당시 대학생이던 필자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에 열광하고 있었다.

그렇게 월드컵으로 전국이 들썩이던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생일잔치에 가던 여중생 심미선, 신호순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미군은 훈련을 위해 인도가 따로 없는 좁은 도로로 이동 중이었다. 두 학생은 갓길을 걷다가 변을 당했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었던 점과 마주 오던 차량과의 무리한 교차 통과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미군 쪽의 과실을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알기를 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당국은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고 애썼다.

미군은 사고 차량이 느린 속도로 운행했다고 했지만, 사고 현장의 자국은 이런 주장과는 상충됐다. 주민들도 평소 미군이 훈련 때마다 과속 운전을 했다고 증언했다.

미군은 주민들에게 훈련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가, 마을 이장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자 뒤늦게 말을 바꿨다.

즉, 주한미군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두 학생이 일렬로 누운 채 두개골이 다 깨질 정도로 장갑차에 깔리게 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소식이 알려지자,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의정부 주한미군 제2사단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모인 사람들은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뒤늦게 피해 학생들의 처참한 시신 사진이 공개되는 등 사건 당시 상황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졌다.

그런데 6월 28일 미2사단 공보실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그 누구도 힐책해야 할 만한 죄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불안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다.

그 뒤로도 시위는 이어졌다.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7월 3일 주한미군 당국은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다 두 학생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데 항의하며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을 미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군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칠 생각이 없었고, 미군의 사건 관련자들은 한국 검찰의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8월 7일 미군은 한국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했다.

소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하 소파, SOFA)을 개정해 한국 당국이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91~2000년에 미군 범죄 6673건 중에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고작 3.8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미군 당국 못지않게, 한국 정부의 행태도 문제였다.

“미군이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는데도 정부의 어느 관계 부서도 반박 성명한 장 내지 않았다(《시사저널》 2002년 12월 2일).”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건이 반미와 미군 철수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

김대중 정부는 소파 개정 문제에도 미온적이었다. 여론에 밀려 내놓은 소파 개선안에 재판권 문제는 포함돼 있

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중생 사망 항의 운동에는 강경하게 대처했다. 진상 규명과 정의를 요구하는 주장을 “각종 근거 없는 의혹과 유언비어 유포”로 규정했다. 시위 도중 연행된 사람도 많았고 그중 여럿이 구속됐다. 구속된 사람 중에는 필자의 동아리 선배도 있었다. 필자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두들겨 맞고 안경을 잃어 버리고, 수차례 얼굴·다리 등을 다쳤다.

김대중 정부는 반미 감정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군사 정권을 후원한 것 때문에 한국은 친미 국가임에도 반미 감정도 강한 편이다. 1997년 IMF 위기를 계기로, 대중의 삶을 망치는 신자유주의 도입을 미국이 강요했다는 인식도 컸다.

김대중 정부를 비롯한 한국 지배계급에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안보 부담을 덜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지배계급은 주한미군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늘 미온적이었고, 미군 반대 운동에 적대적이었다.

무죄 평결

기소된 미군 병사들에게 2002년 11월 20일과 22일 미 군사법원 배심원단이

잇달아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 병사들은 무죄를 받자마자 도망치듯 본국으로 돌아갔다. 뼈뼌려진 셈이다. 적어도 유죄 평결은 나올 것이라 기대했던 유족들은 허탈해 하고 분노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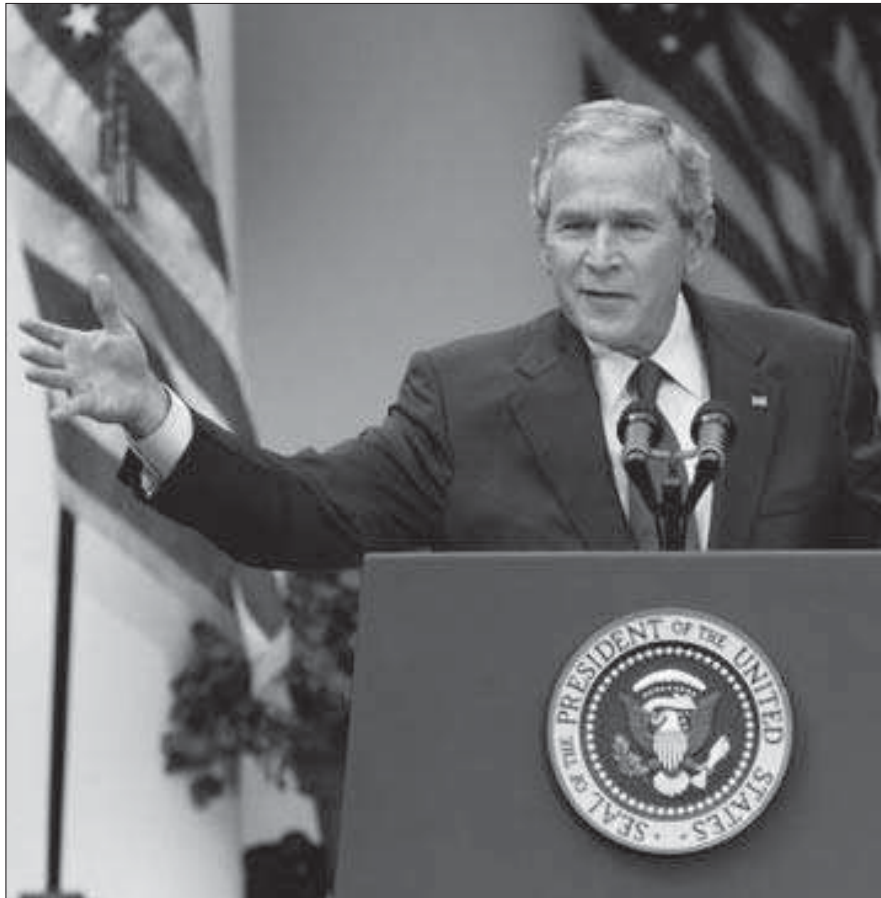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특히, 청년들이 그랬는데, 두 학생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가 컸다. 네티즌 ‘양마’(김기보 씨)가 인터넷 토론방에 올린 촛불 시위 호소가 계기가 돼,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모였다.

촛불 시위의 규모는 매번 커졌다. 12월 7일에는 전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했다. 서울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를 뚫고 미국 대사관 앞으로 향했다. 경찰은 기세에 밀려 제대로 막지 못했다. 필자도 그날 대사관 행진 행렬에 있었는데, 내 옆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대사관 앞으로 가겠다고 경찰과 몸싸움을 불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12월 14일에는 서울에서만 5~6만 명이 참가했다. 시위대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면서 시위대는 더욱 늘었다. 전국적으로 대략 4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며 운동은 절정에 이르렀다.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말 그대로 들불처럼 번졌고, 촛불 운동은 명백히 정치적 전환점이 됐다.

정치적 각성과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조지 부시 2002년 1월 부시 정부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촛불 운동 분출의 배경

두 여중생의 비극적 죽음을 계기로 폭발한 촛불 운동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다.

이 운동은 1990년대 중엽부터 고양되기 시작한 계급투쟁의 일부였다. 1996년 연말에서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이어진 날치기 ‘노동법’ 철회 파업이 특히 중요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승리를 거두고, 날치기 주역인 김영삼 정부를 정치적 그로기 상태로 몰았다.

그해 연말 1997년 IMF 위기가 불러온 시장화는(앞서 언급했듯이) 대중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01년 임기를 시작한 미국 부시 2세 정부의 노선이 야기한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반감도 배경이 됐다. 부시 정부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부시 정부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개시했고, 2002년부터는 이라크 전쟁을 준비했다. 동시에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됐다.

2002년 12월 10일 미국이 스페인 군함을 앞세워 북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자, 한반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한 대중의 반감,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불신도 커졌다.(결국 이듬해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정서가 컸다. 촛불 시위 연단에서는 이라크 침공 반대 주장이 참가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전쟁 물의를 일방주의적이라고 비판했고, 그런 강경 노선이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이 될까 봐 걱정했다.

그런 점에서 2002년 촛불 운동은 미국의 전쟁 드라이브에 반대하는 국제적 운동의 일부였다.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또한 촛불 운동은 그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분출해 대선 기간 내내 지속됐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당선돼 5년 만에 정권이 다시 우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우파 재집권에 대한 반감은 주한미군의 횡포에 대한 반대, 평화에 대한 염원과 연결돼 있었다.

2002년 촛불 운동은 대중, 특히 청년들의 정치적 각성과 활력을 보여 줬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운동을 통해 처음 정치에 눈을 떴다. 자율주의적 정서가 강한 일부는 정치조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말이다.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이회창의 유세 차량은 시위대의 야유와 물병 세례를 받았다. 이회창 자신은 여론에 떠밀려 천주교 측의 여중생 추모 미사에 나타났다가 주최 측으로부터 ‘떠나 달라’는 모욕을 당했고, 참석자 일부는 그에게 종이 뭉치와 계란을 던졌다. 그렇게 대중운동이 우파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재집권을 가로막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그 2년 전 탄생한 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선전했다.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97만여 표를 얻었다. 1997년 대선 때 득표의 세 배다. 대중운동의 분출 속에 민주노동당은 정치적으로 급진화하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촛불 시위를 주도한 운동 내 온건파는 소파 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급적 삼가고 투쟁의 표적을 주로 미국에만 한정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그 와중에 주한미군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당시 일부 좌파는 전쟁이(이라크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잘못 전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촛불 운동이 이에 대응하는 쪽으로 발전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촛불 운동에서도 이라크 침공 반대 정서가 강했다. 청년들의 급진화와 각성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두 달 뒤인 2003년 2월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반전 평화 대행진이 열렸다. 서울에서 5000여 명이 참가했고, 부산·광주 등지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이었고, 전 세계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반전 시위에 참가했다.

2월 15일 반전 시위의 성공적 개최는 촛불 운동으로 변화된 대중 정서를 반영했다. 그런 토양 위에 당시 ‘다함께’(노동자연대의 옛 이름) 같은 혁명적 좌파가 시위를 제안하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조직한 게 주효했다. 그래서 “반전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에서도 반전 운동이 건설될 수 있었다.

반면 여중생 사망 항의 촛불 운동과 대중의 개혁과 평화 염원에 힘입어 당선된 노무현 정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처음부터 대중의 기대를 배신했다. 당시 노무현은 그 실체보다 더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래서 “반미면 어쩌냐”고 했던 노[무현] 후보에게 반미 정서가 강한 20~30대의 표가 대거 몰렸다.(<중앙일보>, 2002년 12월 20일치)

그러나 사실 노무현 자신은 대선 기간 내내 촛불 운동과 거리를 뒀다. 여중생 사망 항의 운동이 벌인 부시 직접 사과 요구 서명운동에 서명도 거부할 정도였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노무현은 “한미 동맹 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현재도 소중하며,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라며 국내 지배계급과 미국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지원하려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UN, NATO 등에서 모두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말이다.

노무현 정부의 침략 전쟁 파병 결정은 커다란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에 대한 기대와 실제 사이의 커다란 차이는 아래로부터 운동이 일어날 틈이 됐다. 그리고(고故 서동만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회고했듯이) 이후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 정부를 임기 초반부터 위기에 빠뜨렸다. 파병 때문에 청년 지지층이 이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시위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워크프티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워크프티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다영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24

우체국 택배 노동조건 개악 시도

인건비 줄여 수익성 높이려는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노동자 조건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5월 30일 서울 보신각에서 전국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6월 2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우정사업본부 규탄 회견을 진행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2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최근 사측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징계·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새 계약서(7월 1일자로 시행)를 들이밀었다.(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택배: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사측은 새 계약서(안)에서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한 물량 기준을 완화했고, 우편물 감소나 사업 환경 변동 시 기준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당 수수료(배송하는 물건당 수수료)가 임금의 거의 전부인 택배 노동자들로서는 사측의 물량 조정과 임금 삭감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새 계약서(안)에는 관리자들의 통제(택배차량에 노조 현수막 게시 금지, 정해진 규격 외 물품 배송 거부 금지 등)에 따르지 않으면 더 쉽게 업무를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한마디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계약서다. 기가 막힌다” 하고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5월 30일 간부 결의대회에서 김규형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전주지회장은 이렇게 성토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만큼 일을 하겠다고, 노조를 결성해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계약서는 뭘니까? 말 안 들으면 언제든 짤라 버리고, 죽든 말든 물량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용 줄이기

우정사업본부가 공격에 나선 것은 인건비를 줄여, 경쟁이 치열해지는 택배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우편사업 경영수지에서 간만에 흑자를 냈다. 택배요금 인상과 택배 물량 확대 덕택이었다. 지난해 우체국 택배 물량은 전년보다 4.9퍼센트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와 집배원 모두를 희생시켜 수익성을 제고하려 한다. 5월 30일 우체국 택배노조 전국 간부결의대회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정사업본부는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비정규직(특수고용)인 위탁택배원들을 늘려 배송해 왔다. 2021년 9월 기준, 우체국 위탁택배원 숫자는 3778명으로 2016년 1870여 명보다 갑절로 늘었고, 배송 택배 물량은 1년에 1억 3300만여 통으로 2016년보다 약 60퍼센트 늘었다. 전체 우체국 택배의 절반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체국의 총 우편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우편 물량이 줄고 있어서다. 올해는 29억 통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44억 통)보다 35퍼센트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측은 전체 우체국 택배 물량 중 위탁택배원들이 배송하는 물량을 50퍼센트 내외로 줄여 비용을 삭감하려고 한다. 위탁택배원들에게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인건

비)는 아끼고, 여기서 남는 물량은 (고정급을 받는) 정규직 집배원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택배·집배 노동자 모두 쥐어짜기

이미 “사측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7월 1일 재계약 이후부터는 [위탁택배원들에 대한] 전국적인 물량 제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사측은 집배원 중 화요일~토요일 택배만 배달하는 인력을 늘리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집배원 노동자들은 택배 물량을 집배원에게 떠넘기는 방안에 반대해 왔다. 인력 충원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집배원들이 택배 전담으로 빠지게 되면, 남은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은 늘고, 노동강도는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집배원들은 ‘겸배’(인력이 부족할 때 동료 물량을 대리 배달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결국 사측은 위탁택배원들과 정규직 집배원 모두를 희생시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택배 배송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도 임금 삭감을 더 손쉽게 하려는 시도이다. 지난해 6월 ‘택배 노동자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택배노조 파업에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여의도우체국 로비에서 사흘간 점거 농성을 하는 등 선봉에서 투쟁해 왔다. 사측은 이런 노동자들을 택배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택배노조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무시 못 할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통제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이성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울산우체국지회장)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반드시 새 계약서를 막아 내겠다”며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며칠 만에 투쟁기금 10만 원 동 의서와 계약서 작성 위임장(노조에 개별 계약서 작성을 위임) 제출에, 우체국 조합원 2700여 명 중 95퍼센트가량이 동참했다.

노조는 6월 9~10일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고, 13일 전국 총력 결의대회와 14일 1차 경고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측의 개악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길 응원한다.

신정환





전력·철도·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5월 17일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퍼센트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는 지하철 9호선 민자 투자 등으로 악명 높은 맥쿼리인프라에서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민영화 쟁점이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비판한 이재명·송영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민영화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도 공기업을 민간에 통째로 팔아넘기는 방식이 아닌 민간 기업의 진출을 아금아금 확대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간 기업의 진출 기회를 늘려 주려 한다. 그러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 전력 민영화

윤석열은 인수위 시절인 4월 28일 전력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력 생산의 민영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다. 전체 전력의 30퍼센트가량은 민간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반면, 전기 판매 부문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관하며 전기 가격을 통제해 왔다.

전기 판매 부문의 민영화는 2002년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된 이후 상당 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영화론자들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핵심 과제로 여겨 왔다.

그런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줬다. 윤석열은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전기 요금 원가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기름값이 치솟을 때는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말이다. 전기 판매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늘어날수록 이윤 논리도 강화돼 전기 요금 인상 압력도 커질 것이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5월 30일 용산 집무실 앞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철도 민영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며 코레일과 SRT(수서발 KTX)를 분할시켰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SRT의 민간 매각은 추진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에서 이런 분할을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보면, 철도 운행을 관할하는 관제권과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떼어내겠다고 한다.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면 민간 기업들이 철도 운송에 진출하기 쉬워진다. 민영화의 수순인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차량 정비 사업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차량 정비에 민간 기업들이 진출해 수익성 논리가 강화되면 철도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압박이 강화될 것이다.

이미 철도에서 수익성 논리가 강화되며 2017~2021년 무궁화호는 36퍼센트나 줄어들었다. 그만큼 교통 취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다. 윤석열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이런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 의료 영리화

윤석열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했다.

또, 윤석열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주장하지만, 그가 말하는 필수의료 담당 주체는 민간 병원들이다.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들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민간 병원들의 영리

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간 병원이 지배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영리 추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투자에서 민자사업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할 서비스 발전산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려는 국민연금 개악도 사회적 연금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민영화의 역사를 보면, 민영화가 당장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금으로 민간 기업들의 이윤을 보전해 줘야 해서 재정 적자 줄이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9~2020년 민자 철도의 손실 보상에 들인 세금이 무려 4조 4000억 원이었다.

그러면서도 요금은 인상되고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압박이 심해졌다.

민주당은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코 원칙적 반대가 아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민영화가 여럿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공공투자에서 민자사업이 늘어나고, 민간 기업들의 전력 생산이 늘어나는 등 민영화가 진행됐다.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기대지 않고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공공서비스에서 이윤 논리를 강화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민영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정선영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해외 좌파 활동가 초청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6월 16일(목) 오후 8시

발제 조셉 추나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인더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 전문 통역사의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

bit.ly/0616-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